

출판계·출판전문가 86.6% ‘도서정가제 유지해야’

(재)한국출판연구소 조사보고서 밝혀 출판사 65%는 ‘마일리지 허용 부적절’

출판계에선 도서정가제의 향후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해 ‘부분적인 할인을 인정한 정가제’와 ‘할인을 불허하는 완전정가제 실현’의 입장이 대세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한국출판연구소가 조사한 <출판사 설립의 신고제 전환에 따른 규제개혁 성과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의견이 각기 46.4퍼센트, 40.2퍼센트를 차지, 전체적으로 86.6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현행법대로 유지 후 2008년 폐지’ 입장은 7.1퍼센트, ‘잘 모르겠다’는 입장은 6.2퍼센트로 소수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와 (재)한국출판연구소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요청으로 실시한 것이다. 향후 규제개혁의 평가지표 및 참고자료로 활용될 이 조사내용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눈길을 끈다. 조사대상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출판영업인협의회 등에 소속된 기존 출판사(164개)와 신고제 전환 이후 신규 설립한 출판사(100개) 등의 출판계 종사자, 교수, 연구자, 평론가, 출판단체 등 출판관련 전문가(59개)들이다.

‘할인을 불허하는 완전한 정가제 실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기존 출판사의 절반(49.4퍼센트)이 호응해 응답 그룹 중 가장 높았고, ‘부분적인 할인을 인정하여 정가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신규 출판사 및 전문가·단체의 각각 49퍼센트가 찬성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리고 ‘현행법대로 유지 후 2008년 폐지’ 의견에는 전문가·단체 가운데 평균 15.3퍼센트(특히 교수 그룹은 25퍼센트)가 찬성하였고, ‘잘 모르겠다’에는 신규 출판사의 응답이 16.0퍼센트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력 출판 분야별로는 전문·학술도서 출판사들이 ‘할인을 불허하는 완전한 정가제 실현’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52.4퍼센트가 찬성하여 평균치(40.2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인터넷서점 등의 마일리지 판매 한도 및 무료 배송 등을 제한해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살려달라는 출판·서점계와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장경쟁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과반수 넘게 나타났다. 마일리지 허용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54.2퍼센트(‘매우 부적절’ 32.2퍼센트, ‘매우 적절’ 7.7퍼센트)였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9.1퍼센트(‘비교적 적절’ 21.4퍼센트, ‘매우 적절’ 7.7퍼센트)였고,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입장은 6.8퍼센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9퍼센트(특히 신규 출판사 그룹에서 21.0퍼센트)로 나타났다.

응답자 그룹별로 ‘부적절’했다는 의견은 기존 출판사(65.2퍼센트)와 출판단체 근무자(71.4퍼센트)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적절했다’는 응답은 전문가·단체(40.7퍼센트, 특히 교수 그룹은 66.7퍼센트)에서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력 출판분야별로는 일반 단행본(62.2퍼센트), 아동도서(57.1퍼센트), 전문·학술도서(55.6퍼센트) 순으로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학습참고서 출판사 그룹의 ‘적절’했다는 의견(40.0퍼센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 1> 도서정가제 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



<그림 2> 마일리지 판매 허용 등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견

